

Online Series

2023. 09. 14. | CO 23-30

북·러 정상회담 평가와 전망

현 승 수(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지방의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보스토치니는 러시아 우주 산업의 핵심 기지로서 이곳이 회담장으로 결정된 배경에는, 북한이 원하는 인공위성이나 미사일 관련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넘겨줄 수도 있다는 대외적 선전 의도가 작용했을 것으로 서방 언론들은 분석했다. 이날 두 정상은 만남은 보스토치니 기지 주요 시설 시찰에 이어, 양국 대표단이 배석한 1시간 30분 간의 확대회담, 30분 간의 일대일 단독회담으로 이어졌으며 만찬까지 4시간 남짓 진행됐다. 정상 간 만남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합의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회담 이후 기자회견이나 공동성명, 합의문도 없었다. 회담 후 만찬장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군과 국민이 ‘악’에 맞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언했고, 옛 소련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최우선 순위는 러시아와의 관계다. 이번 회담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2019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과 김정은이 처음으로 만나 회담을 한 후 4년 만에 성사된 것이다. 당시는 김정은이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상에 나섰다가 성과 없이 귀국한 직후였다. 세계 언론은 김정은이 푸틴으로부터 막대한 규모의 경제 지원과 같은 선물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을 약속하는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김정은에게 안겨주지 않았다.

4년 전과 비교하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 줄 수 있는 파장이 크다. 군사 협력을 회담의 동기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결과가 어떤 형태와 수준으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발표될 수 없는 민감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는 러시아 측 발표가 있었던 데다가, 향후 두 나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경과, 러시아와 북한 체제의 지속성 같은 변수들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되, 한국의 입장에서 이번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

첫째, 미국에 대한 견제를 넘어 적개심을 공유한 러시아와 북한의 연대는 당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강화될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30년 동안 소원했던 북·러 관계가 다시 밀착하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그 전까지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국가 이상의 관심을 주지 않았다. 사실 2000년 푸틴이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가장 먼저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은 현재의 북·러 관계를 생각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푸틴은 강대국 소련이 해체되면서 상실한 전략 자산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북한은 러시아가 다시 회복해야 할 지정학적 전략 자산 중 하나였다. 특히 러시아는 2014년을 전후한 시기에 북한과의 경협 활성화를 위해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빌린 채무의 90%를 탕감해 주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러시아는 실패의 원인을 대북 제재에서 찾지만, 북한의 경제적 기반이 지나치게 취약해 경협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한 점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4년 전과 달리 이번 북·러 밀착은 두 나라가 가치 연대를 앞세우고 있어 전술적 차원보다는 전략적 차원의 판단이라는 인상을 준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대외 전략 방향이 바뀐 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러시아는 2023년 3월 발표한 ‘러시아연방 대외정책개념’에서 서구 문명과의 결별을 천명하며, 미국 패권을 종식시키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반미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과거 동맹국이던 러시아가 이제라도 대미 ‘성전(聖戰)’에 합류한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알렉산드르 솔로비요프는 최근 북·러 밀착 관계를 평가하면서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담론적 수준에서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는 투쟁 의지도 유사하지만, 주권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한다는 생각도 닮았다. (러시아와 북한의) 대외 정책 담론의 또 다른 공통된 특징은 국가주의, ‘포위된 요새’의 이미지, 그리고 정치적 결정의 원천으로서 국가 지도자의 의심할 수 없는 권위다. … 또 하나는 무력 과시를 통해 대결 의지를 표출하면서 국제 문제를 약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¹⁾

솔로비요프의 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한화(Northkoreanization)’하고 있다는 서방 전문가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러시아는 북한이 엄중한 제재 하에서도 미국에 ‘결연히’ 맞서는 태도를 내심 ‘존경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 관계를 발전시킬 때 다른 나라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의 발언은 러시아와 북한의 거래가 철저히 두 나라의 선택과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현재 러시아는 전쟁 지속에 필요한 무기와 병력의 부족 그리고 대외적 고립에 직면해 있다. 곤란에 빠진 러시아에게 북한은 탄환과 포탄,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하고 대미 전선에서 같은 참호에서기를 마다하지 않는 믿음직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²⁾ 북한 역시 러시아를 통해 군사 기술과 식량, 에너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체제를 유지하고 도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밀착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둘째, 러시아가 스스로 동참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핵 비확산체제를 무시한다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북·러 군사 협력은 그것이 북한제 무기이건, 러시아산 기술이건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만일 북·러가 공개적으로 군사 협력과 거래를 하고자 한다면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회담 뒤 자국 TV 채널과 한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 규정 틀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미국 및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단절한 이후, 러시아 관·학계에서는 중국, 북한, 이란, 쿠바와 같은 반미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2017년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승인한 것이 러시아 외교사의 최대 실책 가운데 하나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들렸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무조건 지지하는 북한의 성의에 화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북한과 경제·군사 협력 강도를 끌어올리라고 주문하는 러시아 내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첨단 군사 기술을 쉽게 넘겨줄지는 미지수다. 정상회담

1) “Страна, живущая в трёх эпохах: к 75-летию КНДР,” September 9, 2023, <<https://globalaffairs.ru/articles/k-75-letiyu-kndr/>> (Accessed September 14, 2023).

2) 2023년 1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한 전호(참호)에 서있다”고 말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인 마체고라도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 행동을 지지하면서 “한 전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에 임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기술을 지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그것이 수사에 그칠지 아니면 빠른 속도로 실현될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이 반드시 러시아의 의도대로, 계획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실행에 옮겨지리라고 속단할 필요는 없다. 그 근거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사례가 참고할 만하다. 과거 러시아는 중국에 대해서조차 첨단 군사 기술이나 무기의 제공을 꺼렸다. 중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불법으로 역설계하는 일이 발각된 후 중·러 군사 협력이 중단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2015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과의 밀착을 과시하기 위해 S-400을 중국에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S-400은 러시아판 사드로 불리며 서방을 위협하는 러시아 최고의 방공 미사일 무기다. 푸틴은 중국이 러시아산 무기를 해체, 역설계할 것임을 알면서도 최신 군사 장비와 기술을 기꺼이 중국에 판매했던 것이다. 이런 전례를 감안한다면, 북한에 대한 러시아제 고급 군사 기술과 첨단 무기의 제공 여부는 향후 미·러 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추이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당장 예상되는 정상회담의 성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탄환, 재래식 무기 등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고 그 대가로 식량과 석유 등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다.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도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절실히 원하는 협력 안건이며 이번 정상회담 이후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모든 협력들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러시아의 국제적 신뢰를 크게 실추시킬 자충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러시아가 지원한다면 러시아 스스로 핵 비확산체제를 부정하게 되는 터라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거세질 것이다.

셋째, 북·러 밀착이 북·중·러 연대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중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따라 중국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북·러가 특별히 군사 분야를 중심으로 밀착을 강조하고 있는 데에는 중국에 대한 러시아와 북한의 메시지도 담겨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과 김정은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논리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에게 북·중·러 해상 연합 훈련을 공식 제의했다는 국가정보원의 주장,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연합 군사 훈련에 북한을 포함하는 구상이 “적절해 보인다”고 한 발언 등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다. 2019년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에서 군용기의 합동 비행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동해상에서 합동 해상 훈련도 시행했다. 북한이 이들 훈련에 참여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을 끌어들이려 군사 훈련을 한다고 맹비난하던 북한이 선뜻 외국 군대와 공동 군사 연습을 벌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체제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북·러 간 군사 협력을 달가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미·중 갈등을 더욱 어렵게 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만일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킨다는 공통의 목표 아래서 중·러는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크고 깊을 수 있다. 국제적 고립에 좌절하고 대미 적개심을 공유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불안을 가중시킨다. 핵 무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하는 북·러가 군사적으로 협력할 경우,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에게도 전에 없는 안보적 도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북·러 관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밀착과 군사 협력의 기대 효과를 한껏 부풀림으로써 한국 내 진영 논리를 자극하는 심리전 재료로 이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한국이 러시아와 관계를 악화시키면 북·러가 밀착할 수 있다는 한국 사회 내의 우려를 러시아는 잘 알고 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러시아도 북한과 군사 협력을 할 수 있다고 한 푸틴 대통령의 경고, 한국 정부가 원한다면 북·러 정상회담 내용을 “한국에게만”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최근 러시아 외무차관의 발언은 러시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에서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스스로 국제 합의와 핵 비확산 체제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 또 기형적인 체제를 고수하면서 광인 전략과 벼랑끝 전술을 즐겨 구사해 온 북한과의 협력이 결국 러시아의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음도 주지시켜야 한다. 한·미·일 안보 공조가 북한 핵무력 고도화에서 비롯됐음을 러시아와 국제 사회에 알리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한 정세 인식 하에서 고조되는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KINU 202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